

## ‘12·1 개성 사태’ 이후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강 동 완

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중단, 남북간 철도운행 중단, 개성공단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통령 개인에 대해 강도 높은 대남비방을 하면서, 11월 12일 북한 외무성, 군부, 적십자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일련의 대남 강경책을 예고하였고, 11월 24일에는 그것들을 구체화해서 우리에게 통보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민간단체의 대북빠라 활동 등에 강한 불만을 품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현재 사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고위간부 증언(‘데일리 NK’, 11월 14일자)에 의하면,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남한 자본주의 황색바람’에 오염되어 이전부터 개성공단을 폐쇄하려 했다고 한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개성관광 중단 및 공단 활동 제한 이유를 우리 정부에게 떠넘긴 것은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빠라 살포는 이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지속되던 활동으로,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다.

어떻든 ‘12·1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남북간 경색 국면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자칫하면 군사적 위기 상황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장기불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남북관계마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들은 더더욱 불안한 상태이다. 남북한 경색 국면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에 따라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 대(Vs.) 원칙 고수’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가 윈-윈(Win-Win)하고,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국민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대북정책의 해법은 없는 것일까?

첫째, 정부는 현재의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하고 일관된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압박에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대북 ‘실용주의’ 정책은 지난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남북간 교류협력의 증대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및 개성 관광 등이 시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가 북한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로 언제든지 중단되거나 폐쇄될 수 있다면 이는 ‘공든탑’이 아니라 ‘모래위에 쌓은 탑’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취약한 성과들을 지키기 위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속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정상적인 남북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새롭게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겉으로 보이는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 및 대화 그 자체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다고 해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북한에 대한 실효성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북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구상하였다면 정책의 일관성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실용의 개념이 원칙도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가역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이번 기회에 정부는 북한 역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변화에 나선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변화’가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다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북한 역시 조용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고 나아가 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발전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같은 위협과 협박에 굴복하는 태도는 지난 대북정책의 과오를 답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다. 그동안 민족공조를 강조해 오던 북한이 개성공단이나 민간사업을 볼모로 하여 민족대결을 고취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개성공단이나 민간교류를 인질로 한 협상은 정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단호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이 같은 기본인식하에서 단기적 대응으로서는 우리의 요구를 북측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설익은 정책이나 지원을 북한에 제안했다가 북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정책추진의 지지기반을 더욱 협소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북측이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명분을 살려줄 수 있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북한 ‘갈들이기’나 ‘버릇 고치기’ 등의 표현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표현들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용어들이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단순히 북한의 버릇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통해 남북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탈된 항로를 가다가 언젠가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항로를 바로 잡아 나가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정책의 기본 인식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대북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協治)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은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타협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정책의 실제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다시한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면, 협력과 대결을 순환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작금의 남북관계 상황은 마치 정체된 도로위의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다. 정체된 차 안에서 운전자가 조바심을 낸다고 해서 도로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정체되었다고 해서 차량을 그냥 버리고 가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정체된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점이 지나면 일순간 차량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남북관계 역시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정체된 구간을 견디다 보면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지점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만약 그 도로가 기능을 상실하여 상습정체지역으로서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면, 도로를 확충하거나 선형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남북관계의 안정만을 희구하는 임시방편의 단기적 정책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념이 아닌 실용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이다.

